

ESS 기회 왔다지만… K-배터리, 중국發 리스크는 ‘여전’

美, 中 배터리에 245% 관세 추진
中 점유율 흔들, 韓 반사이익 기대감
원가경쟁력 불안 핵심소재 中 의존
CATL 진출 본격화… 가격방어 변수
‘脫중국’ 공급망 시급 성과 ‘미지수’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관세 정책을 강행함에 따라 미국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을 장악해온 중국 업체들을 대신해 국내 기업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중국산 소재 의존도와 중국 기업들의 국내시장 진출 가능성 등 구조적 리스크를 극복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현재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총관세율은 155.9%에 달한 상태다. 여기에 미국이 중국 관세율을 245%까지 올리겠다는 입장으로 내비치고 있어 추가 인상 가능성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더욱이 내년에는 무역법 301조 관세 인상에 따라 중국산 ESS 배터리 관세율이 173.4% 오를 예정이다. 이에 저렴한 가격으로 미국 ESS 시장을 장악해 온 중국 업체들이 경쟁력을 잃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양국 간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기 전



LG에너지솔루션 전력망용 ESS 배터리 컨테이너 제품.

/LG에너지솔루션

중국산 ESS 배터리 제조 비용은 kWh(킬로와트시)당 90달러 수준으로 집계됐다. 오익환 SNE리서치 부사장은 지난 11일 ‘NGBS 2025’에서 지난해 기준 중국산 ESS 배터리 컨테이너 시스템 제조 비용을 분석하며 관세 외 재료비와 가공비는 약 80달러,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한 추가 비용은 약 8달러로 추산했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 현재 적용 중인 155.9%의 관세율을 적용할 경우 kWh당 제조 비용이 200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북미 ESS 배터리 수요는 78 GWh(기가와트시)로 집계됐다. 이 중 약 87%가 중국산 배터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중국산 제품의 점유율이 높은 상황에서 미국의 고율 관세 조치가 본격화되면 그 공백을 K-배터리 기업들이 메울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국내 기업들이 마냥 반사이익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따르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 주요 배터리 기업들이 핵심 소재 대

부분을 여전히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고율 관세가 적용될 경우 원가 상승 압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며 가격 경쟁력 확보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배터리 핵심 원자재인 리튬, 니켈, 코발트, 흑연 등과 전구체 등 중간재에 대한 높은 중국 의존도는 한국 배터리 산업의 구조적 취약점으로 꼽힌다. 중국이 핵심 광물 수출 통제 등 자원 무기화에 나설 경우 국내 배터리 생산에 직접적인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크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배터리 사들은 호주, 캐나다, 인도네시아, 칠레 등 자원 부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공급망 다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탄력적인 공급망 구축이 필수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뿐만 아니라 CATL 등 중국 기업들이 국내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도 업계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특히 ESS 시장은 중국의 주력 제품인 LFP 배터리의 주요 적용처로, 저가 공세가 펼쳐질 경우 국내 기업 입장에선 가격 방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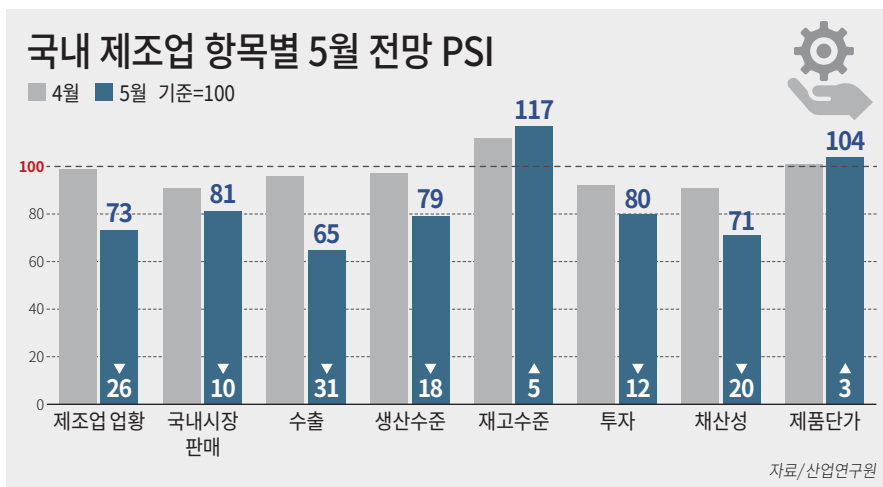
CATL은 지난 1월 서울 강남구에 ‘CATL 코리아’를 설립하고 판매와 유통

등 사업기반을 구축하며 국내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섰다. 업계 안팎에서는 미국의 고율 관세를 피해 한국을 우회 수출 거점으로 활용하려는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 공세에 맞서 국내 배터리 업체들도 대응 전략 모색에 한창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ESS용 LFP배터리 생산 라인을 구축 중이다. 삼성SDI 또한 LFP배터리 개발을 공식화했으며 SK온은 2026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에는 하이엔드 제품을 앞세워왔으나 중저가 시장 수요에 대응하고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한다는 전략이다.

업계 관계자는 “ESS는 구조적으로 북미 시장 수요를 중심에 둔 제품이며 미국의 고율 관세는 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사안”이라며 “중국산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이 일정 부분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여러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북미와 유럽에서 자체적인 생산시설과 공급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소재 확보에 있어 탈중국 등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5월 제조업 더 나빠진다” 디스플레이·車 업황 ‘흔들’

산업연구원, 전문가 서베이 지수
반도체 제외 전 업종 ‘부진 지속’

트럼프발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가 진행 중인 가운데, 국내 산업전문가들은 5월 제조업 업황과 수출, 내수 모두 이전보다 악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연구원은 지난 7~11일 업종별 전문가 127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서베이 지수(PSI)를 조사한 결과, 5월 제조업 업황 전망 PSI가 전달(99)보다 26포인트 하락한 73으로 기준치인 100을 크게 하회했다고 20일 밝혔다.

PSI는 100(전월 대비 변화 없음)을 기준으로 200에 가까울수록 전월대비 개선 의견이 많고, 0에 근접할수록 악화 의견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부 지표별로, 미국발 관세 영향에 따른 불확실성이 큰 수출이 65로 전월(96) 대비 31포인트 급락했다. 내수(81), 생산(79), 투자(80), 채산성(71)도

기준치 아래였다. 내수·수출의 경우 두 자릿수 하락세다.

유형별로는 ICT(74)와 소재(69)부문에서 기준치를 다시 하회하면서, 모든 유형에서 기준치를 밑돌았다. 기계(67) 부문 역시 전월대비 낙폭이 22포인트로 크게 확대됐다.

업종별로 보면, 반도체만 110으로 기준선을 넘어 개선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디스플레이(79), 전자(46), 자동차(46), 조선(93), 기계(975), 화학(80), 철강(78), 섬유(53), 바이오·헬스(91) 등 분야업황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4월 제조업 업황 PSI는 80으로 2개월 만에 다시 기준치 밑으로 전환했고, 내수·수출은 4개월 만에 하락했다. 유형별 업황 현황 PSI는 ICT·기계·소재 모두 전월과 달리 기준치를 동반 하회 전환했고, 업종별 반도체만 기준치를 상회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안덕근 “트럼프 관세 부과, 빨리 협상하자는 메시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미중)양국 관세 조치에 따라 우리 수출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부분이 많아 강 건너 불구경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미국의 대중국 관세 부과와 관련해 “우리 해외 생산 기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등을 파악하고 어떤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지 기업들과 소통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관세 협상 의지를 보인 것과 관련해 “판이 바뀔 수 있다”며 “여러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해 보복조치를 검토하는 국가들이 있다”며 “(미국의 대중 관세는)보복조치를 하게 되면 맞대응하게 되고 악순환이 되는 경우 어떤 상황까지 갈 수 있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 더 이상의 관세 부과보다는 빨리 협상을 하자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며 “관세를 높이 부과해 상대방 국가에 더 큰 피해를 주는 것보다 빨리 협상하고 큰 틀에서 문제를 풀자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안 장관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선 “선불리 협상을 타결하기보다는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양국이 호혜적으로 풀 수 있도록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라며 “일각에서는 카드를 다 써서 이번에 (관세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美-대중국 관세, 우리 수출 간접 영향
23일 세번째 방미, ‘2+2 통상협의’
“선부른 협상 타결보다 협의 중요”

다 풀어야 한다고 하지만 지금 다 풀다 상황이 정리되는 것이 아닌 만큼 공고한 산업협력 관계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미 협상 카드로 거론되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과 관련해서는 “관세 협상을 위해서 사업을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며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우리나라와 가까이에 있는 알래스카에 안정적인 LNG 공급처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카드”라고 말했다.

이어 “현지에 실사단을 파견해 이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파악하고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보고있다”며 “기존 논의와 다르게 일본뿐 아니라 태국, 베트남 등도 이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아시아 국가가 공동 노력해 이 사업이 가능해진다면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부연했다.

조선업 협력과 관련해서는 “미국은 시급하게 조선 산업 역량을 키워 해군력을 보강하겠다는 전략”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안보동맹을 통한 신뢰가 선행돼야 하고, 기술적으로 조선 산업 역량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감안하면 미국이 생각하는 조선산업 부흥의 최적 파트너는 우리나라”라고 강조했다.

한중일 FTA에 대해서는 “국제통상 체제에 불확실성이 제기되면서 3국이 경제적 협력을 해야겠다는 공감대가만 들어지고 있다”며 “(협력의) 수준과 내용, 어떤 분야에서 협력해야 할지 등은 이견이 있어 조율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대미 무역수지 흑자와 관련해 “2분기부터 상당한 문제를 겪을 것이라고 우려되는데, 이번에 미국을 방문해 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 장관은 미국측 제안에 따라 23일 출국, 워싱턴을 방문해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2+2 통상협의’를 갖는다. 세부 일정과 의제는 미국측과 조율 중이다.

/세종=한용수 기자